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2022. 8.



한국경영자총협회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요 약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설문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6.28~7.4(7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포함)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① 현재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수준

- 현재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는 응답자는 65.8%, '부담되지 않는다'는 5.3%
 - ※ '매우 부담된다' 23.7%, '다소 부담된다' 42.1%, '보통이다' 28.9%,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4.6%,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7%

②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40%) 수준에 대한 평가

-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40%)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8.4%가 '높거나 적절하다'고 평가
 - ※ '매우 높다' 14.3%, '다소 높다' 33.3%, '적절하다' 30.8%, '다소 낮다' 17.3%, '매우 낮다' 4.3%

③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과제

- 국민연금이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수탁자로서의 과제로, 응답자의 36.2%가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1순위로 꼽은 반면,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7.7%에 불과
 - ※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36.2%,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 32.7%, '국가 정책에 부응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 15.4%,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7.7%, '잘 모르겠다' 8.0%

④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

-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32.4%), '정부 국고지원 의무화'(19.1%),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17.5%), '소득대체율 인하'(12.7%), '보험료율 인상'(9.6%),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8.7%) 順

*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은 이미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국민 입장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수준 강화보다 오히려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임을 반영
- 「국민연금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20.5월, 경총)에서 소득대체율(40%) 조정과 관련, 응답자의 54.8%가 '현행 유지 또는 인하'를 요구한 반면, '인상'은 29.2%

⑤ 연금개혁안으로 보험료율을 불가피 인상할 경우 국민 수용도

- 연금개혁을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할 경우, 국민 10명 중 7명이 '10%' 수용

※ '10%' 71.1%, '11%' 8.9%, '12%' 11.7%, '13%' 3.1%, '14%' 0.5%, '15%' 3.3%, '16% 이상'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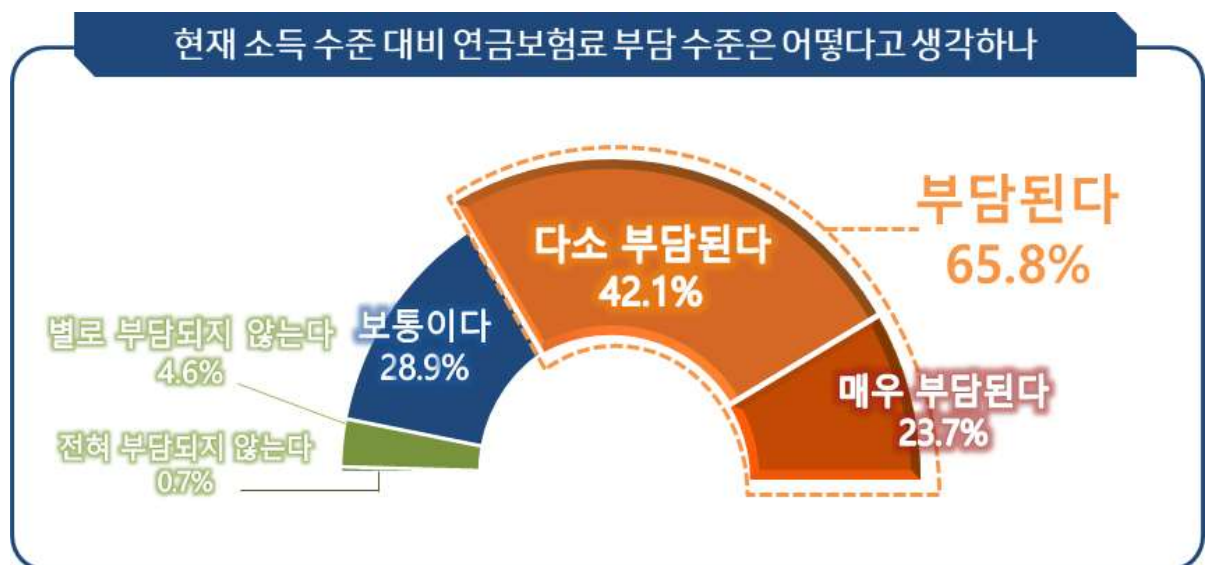
1

현재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수준

▶ **부담된다 65.8%** > **보통이다 28.9%** > **부담되지 않는다 5.3%**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6.28~7.4(7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포함)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8%가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변
-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 수준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부담된다' 23.7%, '다소 부담된다' 42.1%로 답해 전체 응답자의 65.8%가 연금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반해 '보통이다'는 응답자는 28.9%였으며,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4.6%와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7% 등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현재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수준



□ **(가입유형별)**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사업장가입자 64.3%, 지역가입자 71.3%, 임의(계속)가입자 64.8%로 모든 가입유형에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단독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 64.3%, '보통이다' 30.5%, '부담되지 않는다' 5.3%
-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담된다' 71.3%, '보통이다' 23.9%, '부담되지 않는다' 4.8%
- 기타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부담된다' 64.8%, '보통이다' 28.7%, '부담되지 않는다' 6.5%

<표 1> 가입유형별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 수준

(단위 : %)

구분	부담된다	부담 수준		보통이다	부담되지 않는다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매우 부담된다	다소 부담된다					
전체	65.8	23.7	42.1	28.9	6.8	6.1	0.7	
가입유형	사업장	64.3	24.6	39.7	30.5	5.3	4.4	0.9
	지역	71.3	24.9	46.4	23.9	4.8	4.8	0.0
	임의(계속)	64.8	15.7	49.1	28.7	6.5	5.6	0.9

□ **(연령대별)**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금수령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부담된다'는 답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자는 20대 74.6%, 30대 74.3%, 40대 71.6%, 50대 62.0%, 60대 이상 54.2%
- 20~40대에서는 '부담된다'는 응답자가 70%를 상회하는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각각 62.0%, 54.2%가 '부담된다'고 응답
- 고연령층일수록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낮아지는 것은 연금수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표 2> 연령대별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 수준

(단위 : %)

구분	부담된다	부담 수준		보통이다	부담되지 않는다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매우 부담된다	다소 부담된다					
전체	65.8	23.7	42.1	28.9	6.8	6.1	0.7	
연령대	20대	74.6	30.5	44.1	22.6	2.8	2.3	0.6
	30대	74.3	28.3	46.1	21.1	4.6	4.6	0.0
	40대	71.6	29.9	41.8	25.8	2.6	2.6	0.0
	50대	62.0	21.5	40.5	32.5	5.5	5.0	0.5
	60대 이상	54.2	14.1	40.1	36.8	9.0	7.2	1.8

2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40%) 수준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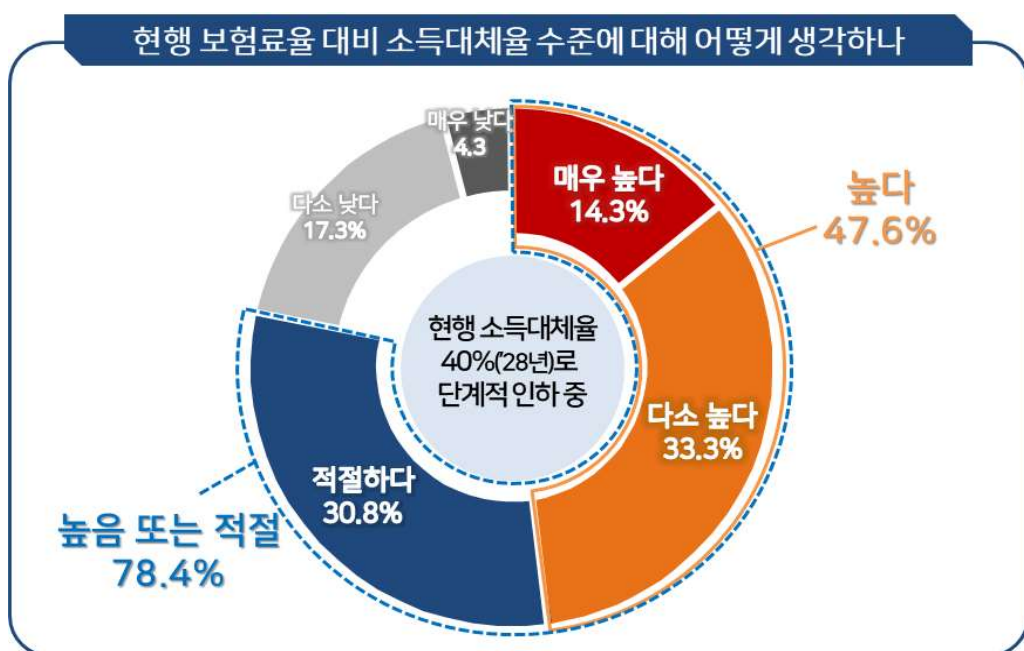
▶ **높다 47.6%** > 적절하다 30.8% > **낮다 21.6%**

□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40%)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8.4%가 '높다' 또는 '적절하다'라고 평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21.6%에 그침.

- ▶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시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받도록 설계
- ▶ 2022년 현재 43%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인하 예정

- 현행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 수준에 대해 '매우 높다' 14.3%, '다소 높다' 33.3% 등 전체 응답자의 47.6%가 '높다'고 평가, '적절하다' 30.8%까지 감안하면, 전체 응답자의 78.4%가 소득대체율을 긍정적으로 평가
- 우리사회 일부에서 제기되는 소득대체율 인상 주장은 국민적 바램과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현행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 수준 평가



□ (가입유형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모두 현행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

- 현행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 수준에 대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높다' 49.5%, '적절하다' 30.8%로 전체 78.1%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높다' 45.0%, '적절하다' 24.9%로 전체 78.5%가,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높다' 40.7%, '적절하다' 39.8%로 전체 80.5%가 긍정적으로 평가

<표 3> 가입유형별 현행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 수준 평가

(단위 : %)

구분		높다	적절하다		적절하다	낮다	매우 낮다	
			매우 높다	다소 높다			다소 낮다	매우 낮다
전체		47.6	14.3	33.3	30.8	21.6	17.3	4.3
가입유형	사업장	49.5	24.6	39.7	28.6	22.0	7.0	1.1
	지역	45.0	24.9	46.4	33.5	21.5	2.9	0.0
	임의(계속)	40.7	15.7	49.1	39.8	19.4	8.5	0.0

□ (연령대별) 모든 연령대에서 현행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

- 20대 81.9%, 30대 77.6%, 40대 80.5%, 50대 72.5%, 60대 이상 79.4%가 현행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

- '높다'는 응답은 20대 53.7%, 30대 50.0%, 40대 55.2%, 50대 40.5%, 60대 이상 42.2%

- '적절하다'는 응답은 20대 28.2%, 30대 27.6%, 40대 25.3%, 50대 32%, 60대 이상 37.2%

<표 4> 연령대별 현행 보험료를 대비 소득대체율 수준 평가

(단위 : %)

구분		높다	매우 높다		적절하다	낮다	매우 낮다	
			매우 높다	다소 높다			다소 낮다	매우 낮다
전체		47.6	14.3	33.3	30.8	21.6	17.3	4.3
연령대	20대	53.7	16.4	37.3	28.2	18.1	12.4	5.6
	30대	50.0	14.5	35.5	27.6	22.4	18.4	3.9
	40대	55.2	19.1	36.1	25.3	19.6	17.0	2.6
	50대	40.5	12.5	28.0	32.0	27.5	21.5	6.0
	60대 이상	42.2	10.8	31.4	37.2	20.6	17.0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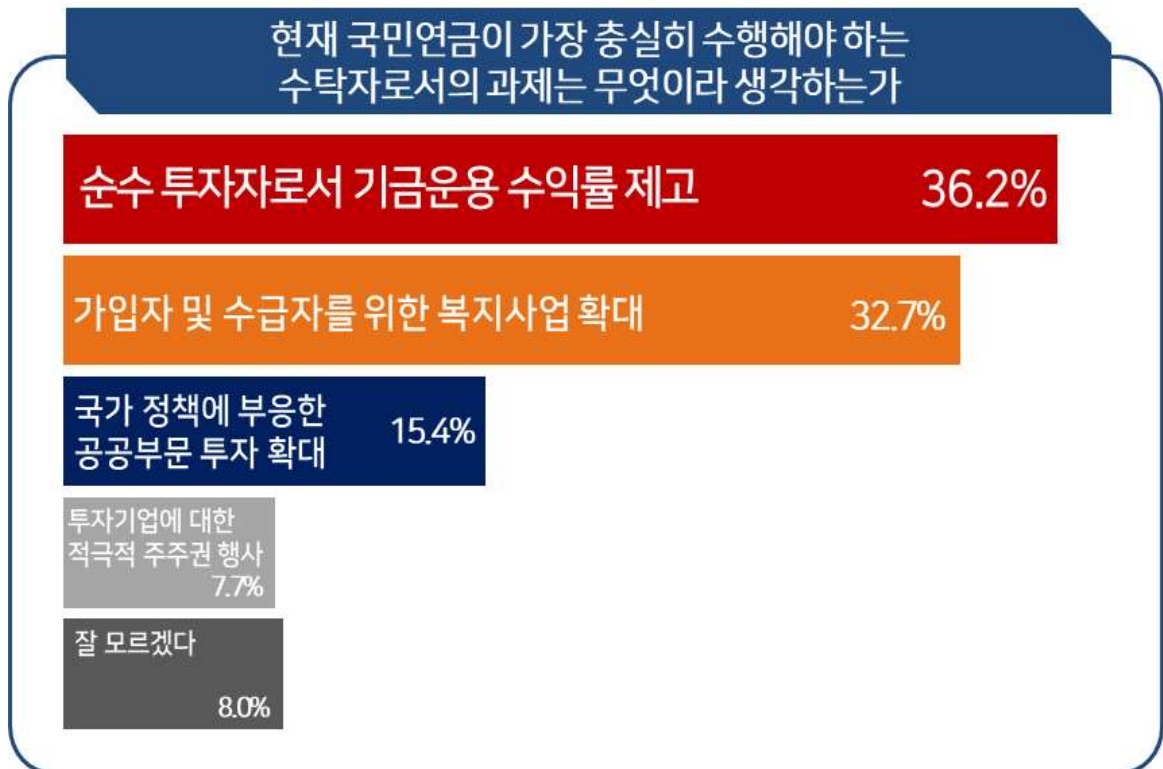
3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과제

- ▶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36.2%...**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7.7%

- 국민연금이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수탁자 과제로 응답자의 36.2%가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으로 꼽은 반면,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가장 낮은 7.7%로 조사됨.
- 국민연금이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수탁자 과제로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36.2%,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 32.7%, '국가 정책에 부응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 15.4%,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7.7% 순으로 응답('잘 모르겠다' 제외)

[그림 3]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과제



- **(가입유형별)** 사업장가입자의 35.9%, 임의(계속)가입자의 43.5%가 '순수 투자자로서의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지역가입자의 34.4%가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를 최우선 수탁자 과제로 응답
- 사업장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순수 투자자로서의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사업장 35.9%, 임의 43.5%),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사업장 34.1%, 임의 20.4%), '국가 정책에 부응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사업장 14.9%, 임의 18.5%),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사업장 7.2%, 임의 8.3%)순으로 응답
 -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34.4%), '순수 투자자로서의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33.5%), '국가 정책에 부응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15.3%),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9.1%) 순으로 응답
 - 모든 가입유형에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보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중요 수탁자 책임 과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가입유형별 최우선 수탁자 과제 인식

(단위 : %)

구분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	국가 정책에 부응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잘 모르겠다	
전체	36.2	32.7	15.4	7.7	8.0	
가입유형	사업장	35.9	34.1	14.9	7.2	7.9
	지역	33.5	34.4	15.3	9.1	7.7
	임의(계속)	43.5	20.4	18.5	8.3	9.3

- **(연령대별)**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과제로 20~30대에서는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가, 40대 이상에서는 '순수 투자자로서의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0~30대에서는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를, 40대 이상에서는 '순수 투자자로서의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가장 중요한 수탁자 과제로 인식
 - 이는 연금수급 연령과 거리가 있는 20~30대의 경우 가입자에 즉각적인 혜택이 있는 '복지사업 확대'를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됨
- 모든 연령대에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보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중요 수탁자 책임 과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연령대별 최우선 수탁자 과제 인식

(단위 : %)

구분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	국가 정책에 부응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잘 모르겠다	
전체	36.2	32.7	15.4	7.7	8.0	
연령대	20대	30.5	39.0	16.9	4.5	9.0
	30대	30.3	40.1	12.5	6.6	10.5
	40대	40.2	25.8	16.5	5.7	11.9
	50대	39.5	34.0	12.5	9.0	5.0
	60대 이상	37.9	28.5	17.3	10.8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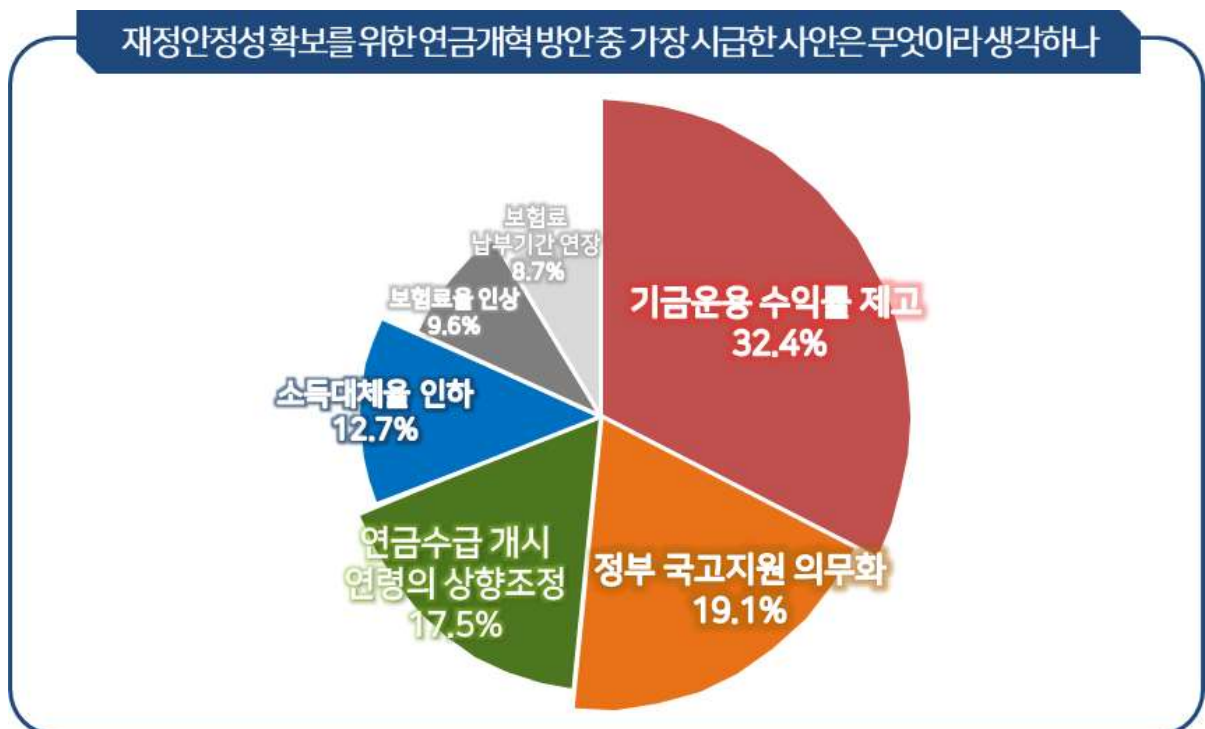
4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

▶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32.4%** > ... > **보험료율 인상 9.6%**

-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2.4%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라고 답변, '보험료율 인상'은 9.6%에 불과
-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32.4%, '정부 국고지원 의무화' 19.1%, '연금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조정' 17.5% '소득대체율 인하' 12.7%, '보험료율 인상' 9.6%,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8.7% 순으로 조사됨.
- 지금까지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논의보다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 보다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국민연금 개혁방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



□ (가입유형별) 모든 가입유형에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32.4%, '정부 국고지원 의무화' 19.1%, '연금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조정' 17.5% '소득대체율 인하' 12.7% '보험료율 인상' 9.6%,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8.7% 순
-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28.7%, '정부 국고지원 의무화' 19.1%, '연금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조정' 16.3% '소득대체율 인하' 13.4%,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12.0%, '보험료율 인상' 4.8% 순
 - ※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4.8%)가 사업장가입자(10.7%)와 임의(계속)가입자에 비해(12.0%)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34.4%, '연금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조정' 23.1%, '정부 국고지원 의무화' 21.3%, '보험료율 인상' 12.0%, '소득대체율 인하' 7.4%,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7.4% 순
 - ※ '소득대체율 인하'에 대해서는 임의(계속)가입자(7.4%)가 사업장가입자(13.3%) 및 지역가입자(13.4%)에 비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연금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임의(계속)가입자(23.1%)가 사업장가입자(17.0%) 및 지역가입자(16.3%)에 비해 우호적으로 인식

<표 7> 가입유형별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연금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정부 국고지원 의무화	
전체	9.6	12.7	8.7	17.5	32.4	19.1	
가입유형	사업장	10.7	13.3	7.9	17.0	32.4	18.7
	지역	4.8	13.4	12.0	16.3	34.4	19.1
	임의(계속)	12.0	7.4	7.4	23.1	28.7	21.3

- (연령대별) 전 연령대에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반면,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등 국민 부담 유발 사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
-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가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는 응답은 20대 26.6%, 30대 28.9%, 40대 36.6%, 50대 37.5% 60대 이상 31.4%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보험료율 인상'은 50대(8.5%), 60대 이상(9.0%)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은 20대(7.3%), 30대(10.5%), 40대(4.6%)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

<표 8>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

(단위 : %)

구분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연금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정부 국고지원 의무화	
전체	9.6	12.7	8.7	17.5	32.4	19.1	
연령대	20대	13.6	13.6	7.3	18.6	26.6	20.3
	30대	11.2	14.5	10.5	18.4	28.9	16.4
	40대	6.7	13.4	4.6	17.5	36.6	21.1
	50대	8.5	9.5	10.0	12.0	37.5	22.5
	60대 이상	9.0	13.0	10.5	20.2	31.4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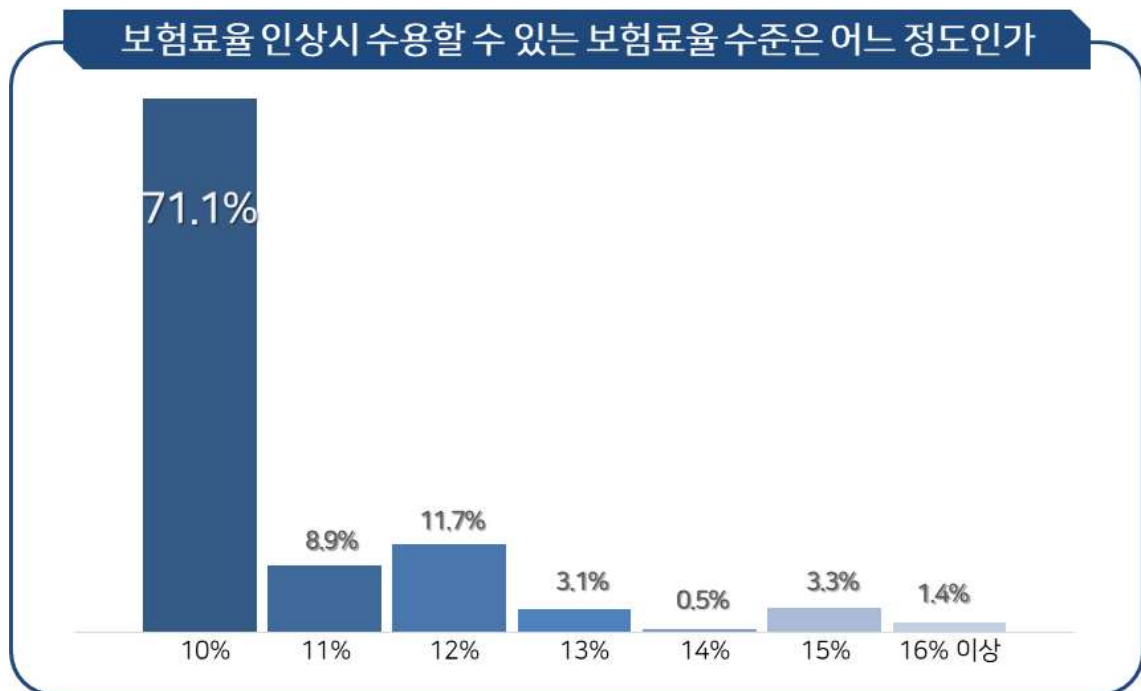
5

연금개혁안으로 보험료율을 불가피 인상할 경우 국민 수용도

▶ 보험료율 '10%' 수용 71.1%

- 연금개혁을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될 경우 수용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1.1%가 '10%' 응답
- 보험료율을 불가피하게 인상할 경우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 전체 응답자의 71.1%가 '10%' 선택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91.7%)이 10~12% 내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보험료율 인상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



- (가입유형별) 모든 가입유형에서 '10%'를 가장 선호

-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 '10%'를 응답한 비중은 사업장가입자 69.4%, 지역가입자 76.6%, 임의(계속)가입자가 71.3%로 나타남.

<표 9> 가입유형별 수용가능 보험료율 수준

(단위 : %)

구분	10%	11%	12%	13%	14%	15%	16% 이상	
전체	71.1	8.9	11.7	3.1	0.5	3.3	1.4	
가입유형	사업장	69.4	9.1	12.6	3.7	0.7	3.1	1.5
	지역	76.6	9.1	10.0	1.0	0.0	2.9	0.5
	임의(계속)	71.3	7.4	9.3	3.7	0.0	5.6	2.8

□ (연령대별) 모든 연령대에서 '10%'를 가장 선호

○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 '10%'를 응답한 비중은 20대 70.1%, 30대 76.3%, 40대 77.3%, 50대 71.0%, 60대 이상 64.6%

- 연금수급 연령에 가까운 60대 이상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에 다소 우호적인 편으로 나타남.

<표 10> 연령대별 수용가능 보험료율 수준

(단위 : %)

구분	10%	11%	12%	13%	14%	15%	16% 이상	
전체	71.1	8.9	11.7	3.1	0.5	3.3	1.4	
연령대	20대	70.1	9.0	9.0	6.8	1.7	0.0	3.4
	30대	76.3	10.5	9.9	0.7	0.0	2.6	0.0
	40대	77.3	6.7	11.3	2.6	0.0	1.5	0.5
	50대	71.0	9.5	11.0	2.5	1.0	4.5	0.5
	60대 이상	64.6	9.0	15.2	2.9	0.0	6.1	2.2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일반 국민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수준 등 국민연금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국민연금 정책과제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2. 조사대상 및 방식

- 조사대상 :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 표 본 수 : 1,000개
- 가 중 치 : 성별·지역·연령비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조사방식 : 온라인패널설문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 3.1%p
- 조사기간 : 2022. 6. 28. ~ 7. 4. (7일간)
- 수행기관 : (주)모노커뮤니케이션즈 / 모노리서치

4. 주요 조사항목

- 현재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수준
-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40%) 수준에 대한 평가
-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과제
-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
- 연금개혁안으로 보험료율을 불가피 인상할 경우 국민 수용도

5. 응답자 개요

구분		응답자
전체		1,000명 (100.0%)
성별	남	496명 (49.6%)
	여	504명 (50.4%)
가입유형별	사업장가입자	683명 (68.3%)
	지역가입자	209명 (20.9%)
	기타(임의*·임의계속가입자** 등)	108명 (10.8%)
연령별	20대	177명 (17.7%)
	30대	152명 (15.2%)
	40대	194명 (19.4%)
	50대	200명 (20.0%)
	60대 이상	277명 (27.7%)

* 18세 이상 60세 미만 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가입을 유지하는 사람(65세까지 가능)